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

2026년 제7차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

□ 회의개요

○ **(일시)** ‘26.9.15.(화) 15:00~17:10

○ **(장소)**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(1관 510호)

○ **(참석)** 분과위원, 기후대응위 사무처(분과위 담당 국장, 과장 등), 관계부처

○ **(안건)**

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‘25년 이행실적 평가결과(안) **심의**

②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’27~‘30 관장기관(부문)별 온실가스 관리목표(안) **심의**

③ 사업장·공공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**보고**

□ 주요 논의내용

【안건1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‘25년 이행실적 평가결과(안) : 원안의결

○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편*(’25.4)에 따른 ‘26년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운영상 보완·개선 필요사항을 논의

* 목표설정 방식개선, 배출허용량 이월, 차입 및 상쇄 등 유연성 기제 도입 등

【안건2】 ’27~‘30 관장기관(부문)별 온실가스 관리목표(안) : 원안의결

○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른 부문별 실질적인 감축효과 분석을 통해 관리목표 설정 및 제도 운영방향 점검 필요

- 산업 부문 감축률 설정시 고려된 목표 달성 요인에 대한 검토 필요

【안건3】 사업장·공공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현황

○ **(총괄)** 사업장·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가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

- 사업장 목표관리제는 목표 이행관리와 함께 대상업체의 관리역량 제고 및 감축 잠재력 확충을 지원하는 방향 검토 필요
-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감축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운영모델 발굴 필요

○ **(사업장 부문)** ’25.4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편사항*의 적용 성과를 평가하고, 국가 온실가스 목표(NDC)와의 정합성, 관리업체 지정기준, 부문별 감축률 및 배출권거래제(ETS) 연계방안 등 제도 운영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

* 목표설정 방식 개선(예상 배출량→절대량), 제도운영절차 개선(계획기간 1년→5년 확대, 기업 감축여건 고려), 유연성 기제 도입(배출허용량 이월, 차입, 상쇄 등) 등

-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·사후 인센티브 강화 방안 검토 필요

○ **(공공 부문)** 기후부 용역을 통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,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향 논의 필요

- 현재 사업장 목표관리제에 적용 중인 제도 개편사항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도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
- 제도 이행시 이용자의 쾌적성과 에너지효율을 함께 고려한 관리 기준 마련 필요
-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등 감축사업의 추진체계 및 재원 연계방안 검토 필요